

칼럼

김윤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입법 실시하라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개혁과 법안이 쌓여 있는데도 정쟁(政爭)으로 수개월째 국회를 가동하지 않고 있으며, 법정 국회인 6월도 보름이 지나도록 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간의 직무유기 를 국민 앞에 시좌하고 무조건 국회를 열라고 여야 모두에게 요구했다.

대화와 태협이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에서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민을 외면하고 국회를 부정하는 정당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고행 국회는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의 내용으로 지금 퍼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을 최저점으로 삼고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입법하고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6월 말로 끝나는 국회정치개혁특위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선거제 개혁과 함

께 국회 예산 통과, 국회의원 연봉 산정을 위한 독립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일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 한 명에게 연봉이 1억5천만 원이 넘고, 서기관 2명의 보좌관 등 9명의 보좌진 등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은 수억 원이 된다. 그동안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았다는 공약이나 선언은 모두가 실행이 없는 헛된 구두선(口頭禪)이 되었다.

어민주당 해산 청구에는 30만여 명이 찬성했다.

정당은 우리 헌법이 존립과 활동을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체(要體)다. 인류 역사에서 얻은 피어린 교훈이 하나의 정당이 있으면 독재가 되기 쉽고, 기본권 등 인권이 보장이 안된다는 것이다.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서로 견제와 균형, 경쟁과 협력을 해야 정치도 경제도 발전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최선의 제도로 인정되고 있다.

면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의원이 절대 권력이 아니고 국민이 위임해준 한시적인 제한된 권력이라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는 제도 자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회 의원들이 조심하고 국민들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예방적이고 견제적인 효과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 의원들이 자기 목에 방울을 디는 일을 좀처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시민단체 등 국민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입법과 실시가 어렵다.

선거제 개혁, 국회의원 세비(연봉) 책정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 국회 예산 통과 등 국회개혁과 정치개혁은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이 국민을 무서워 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마연하지만 본분적인 해결책은 국민들이 좀 더 깨어나야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선과 정의는 변함없이 우리 가슴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지만 지키지 않으면 침해받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거지다.

'이놈들아' / 우리 쪽발이 총 맞고 칼에 찔려 가면서 / 민주 눈 보라 속에서 모여있어 / 가슴 열고 / 좌로 가든 우로 가든 / 하루라도 한시라도 서둘러 / 조국 독립으로 가자 / 매일 이것이 결론이었다 / 100년 지나 똑똑하다는 너희도 / 아니 전 세계 인간들이 / 아직도 결론 놓낸 것 가지고 / 목숨 걸고 가족 뒤로하고 너희 위해 쏘운 / 우리에게 그러면 서운하다 / 조국의 많이 배운 조카들이!

社說

노인 교통사고 예방 나서야

노인들의 교통사고가 증가일로에 있다. 고령인구의 증가도 하나의 원인이 되긴 하겠으나 이와 함께 운전자들의 운전 부주의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다.